

“오월 영령께 감사”… 정청래, 5·18민주묘지 참배

어제 비공식일정 광주 방문
강시장·김지사 등 50명 참석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민주당 대표 출마 공식 선언

“12·3 내란을 막아주신 5·18 광주 민주영령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5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시·도 의원 등 50여명과 함께 오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정 의원은 방명록에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12·3 내란을 막아주신 5·18 광주 민주영령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는 문구를 작성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5·18민주항쟁 추모탑으로 향한 이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헌화와 분향을 했다.

김범태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장의 안내로 묘역에 입장해 문재학 열사, 박관현 열사 등의 묘소를 찾아 오월 영웅들의 넋을 달랬다. 정 의원은 무명열사 묘소 앞에서 꿇어 앉아 이름 모를 영웅의 묘비를 닦으며 애도했다.

정 의원은 “광주·전남 골목골목 공동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5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대위원장으로 지역을 누비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뿌리가 광주 5·18 정신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지난 3박4일 동안 호남 감사 인사 투어를 진행했는데 오늘 오월 영령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민주주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쳐준 대한민

국 헌법과 민주주의 뿌리가 5·18 정신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되고, 이를 위해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새기는 참배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과제는 내란 세력 척결, 내란 종식,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모두가 합심, 단결해 시대적 과제를 이뤄야 한다”며 “5·18 광주 영령들께 반드시 그 임무를 완수할 것을 다짐했다”고 강조했다.

참배를 마친 후 민주묘지를 찾은 시민과 지지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8년째 정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임남순(52)씨는 “지나해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

던 오월 정신이 갖는 이곳을 찾은 정청래 의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았다”면서 “새로운 정부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정 의원이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응원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균(53)씨도 “광주를 잊지 않고 다시 찾아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 특히 오월 영령들을 달래주기 위해 민주묘지에 온 것만으로 정 의원의 진심이 느껴진다”며 “우리나라 정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며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당원 주권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맨 앞에서 싸웠고 12·3 계엄 내란 사태에 맞서 국민과 함께 최선봉에서 싸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대표로 이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다”며 “이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이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서임석 시의원 “광주시 민간위탁 사업 관리 부실”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의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부실 운영과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서임석(사진) 시의원은 최근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광주시 민간위탁 사업의 수수료 지급 형평성, 위수탁 계약서 부실, 운영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등 총체적 난맥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시가 운영 중인 73개 민간위탁 사업 중 13개소(18%)만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수수료율은 최저 0.91%에서 최고 7.93%까지 편차가 심했다. 동일 부서 내 여러 사업에서도 수수료율이 0.91%에서 5.0%까지 들쭉날쭉해 수수료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부서별로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계약서에 수수료 또는 비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지만, 13개 위탁기관 중 5곳(38%)은 계약서에 수수료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위탁 운영심의 위원회도 위원 과반 미출석으로 9회 중 7회(78%)가 비대면 서면회의로 진행됐고, 민간수탁 기관의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사례도 전체 80건 중 9건이 확인됐다.

서 의원은 “행정 효율성과 시민 세금 낭비 방지를 위해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과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정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의회의 감사 요청에 따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도 “시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민간위탁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공병철 광산구의원, “군 소음피해 학교 법적 지원책을”

공병철(사진) 광산구의원이 지역 내 군 소음으로 피해받고 있는 학생들의 종합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제안에 나섰다.

15일 광주광역시 광산의회에 따르면 공 의원은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 소음보상법”에 학교 등 교육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소음 피해학교에 대해 방음시설, 대체 학습, 심리상담 등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와 군이 지역사회와 소통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 내에 6개 학교(송정동초·도산초·송정초·송광중·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자동화설비마이스터



고)가 있으며, 재학·재직 중인 학생·교직원만도 2800여명에 달한다. 학생들은 전주기 소음으로 수업 방해, 집중력 저하, 심리 불안 등 학습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 의원은 “민간공항 인근 지역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학교에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군소음보상법’은 개인 재산피해 외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전무하며, 민간공항이 75웨클인 데 비해 군 공항은 85웨클 이상부터 소음 지역으로 규정되어 더 불리한 기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철 기자

5·18 역사 왜곡 게임 ‘광주런닝맨’, 전 세계에서 차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서도 삭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하·왜곡하는 내용의 게임 ‘광주런닝맨’을 전 세계 스팀(Steam) 플랫폼에서 차단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15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 3월 국내 이용자들이 해당 게임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선제적으로 차단 조치를 취했으며, 스팀 운영사 밸브 코퍼

레이션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없게끔 삭제해왔다.

‘광주 런닝맨’은 독립적인 게임이 아닌, ‘마운트 앤 블레이드: 워밴드’라는 2008년 작 게임의 모드(mod·게임을 수정하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모드 제작자는 중세 시대 전쟁을 다룬 원본 게임에 장갑차와 버스, 군인 모델링을 추가해 덧입힌 뒤 모드를 공유할 수 있는 스팀 내 공간 ‘창작

마당’에 지난해 9월 업로드했다.

게임위는 5·18기념재단,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조해 밸브 사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고, 밸브도 이에 호응해 문제의 게임물을 전 세계에서 차단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향후에도 해외 게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유철 기자

“교육은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힘”

문형배 전 재판관 토크콘서트 참여

문형배(사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전라남도 순천을 방문해 “교육은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힘이자, 국가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을 초대해 ‘전남교육청, 민주시민 토크콘서트’ 특강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강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을 비롯해 학생과 학부모, 도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그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헌법에 명시된 것은 1948년으로, 교육은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정부는 교육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충성을 강조하는 교육은 권위주의적이며 자율성과 기본권을 키우는 교육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전 재판관은 이번 특강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시민이 되고 민주시민 공동체



의 일원이 되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전남학생의회가 진행을 맡아 학생들과 문 전 재판관이 교육과 헌법, 민주주의를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학생들은 소통과 화합의 민주주의 실현 방안, 자유의 한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에 문 전 재판관은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특강은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교육청, 학교 운동부 운영경비 공개 확대

인사 분야 청렴도 향상 추진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초·중·고 운동부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인사 분야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

광주교육청은 15일 각 학교 운동부 운

영경비의 공개를 확대하고, 관련 학부모 청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운동부 운영의 청렴 우수사례를 발굴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당국이나 학교에 마련된 비리 신고 시스템의 활용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특히 운동부 운영경비의 경우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에 의해 부적절 사용 의혹이 제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시교육청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부적인 공개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광주교육청 청렴정책추진단은 오는 8월 학교 운동부 및 인사 분야의 청렴도 향상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결과를 공유하며 추가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